

### Ⅲ. 이해충돌방지법

[공무수행사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]

## 소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

#### □ 이해충돌의 정의 (법 제2조제4호)

- 이해충돌이란,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
- ※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공직자는 아니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집되어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적용함

#### □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·기피 신청

- 심의안건의 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사적이해관계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
- ※ 회의 소집일 이전에 회의 안건의 내용을 전달 받았을 때, 회의 참석 전에 사적이해관계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등 조치
- 신고 및 회피 신청에 따른 위원 제척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
- 위반 시,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, 재산상 이익 환수

#### 사적이해관계자(법 제2조제6호 각 목)

가.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(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\*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\* 가족: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나.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·대표자·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다. 위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·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

라.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위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

마.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위원 자신이 대리·고문·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

바.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·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사. 그 밖에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
#### □ 직무 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

-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됨
- ※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않음
- 위반 시, 징계 및 7년 이하 징역, 7천만 원 이하 벌금,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

### 학부모 청렴교육 자료

2022학년도 하반기

소래초등학교

## I. 불법 찬조금 근절

### 1 불법찬조금이란?

학부모단체 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, 청소년단체 등 교육 활동 후원단체)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**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**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
⇒ 불법찬조금은 개별 차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차지임

### 2 주요 위반 내역

-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,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
- 운동부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코치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부는 합숙소 식자재료비, 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임의 집행
- 반대표 학부모들이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각출

### 3 불법찬조금의 유형

○ 불법찬조금의 유형

- ▶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, 출전비,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
- ※ 코치 인건비, 우승상례비, 명절휴가비,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
- ▶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·간접적으로 요구
- ※ 학생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(스승의 날, 소풍, 운동회, 현장학습), 심화학습반 운영비, 교직원 선물비, 어린이(학생)신문 등
- ▶ 학교장 등의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,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
- ▶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
- ▶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

### 4 불법찬조금 신고

- 시흥교육지원청 : <http://goesh.kr> → 사이버신고센터 → 불법찬조금신고
- 전 화 :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 031)488-2463

## II. 청탁금지법

### 1 적용 대상 및 내용

#### □ 적용대상(법 제11조제1항)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\*에 따라 설치된 **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**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임

- 위원회는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

\* 법령에는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·규칙도 포함되며,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도 해당함

< 예 시 >

-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부금품심사위원회 등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**학교운영위원회**,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

#### □ 청탁금지법 적용 내용(법 제11조제1항, 제2항, 제5조~제9조)

- 공무수행사인인 민간위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인 아니므로 **‘공무 수행에 관하여’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**

- **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**(법 제5조~제7조)

- (금지행위) 수행하는 **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**하는 경우,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\*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

\*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·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
< 부정청탁 대상직무 >

①인·허가 등 직무, ②행정처분·형벌부과 감경·면제, ③채용·승진 등 인사, ④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무 선정·탈락 직무, ⑤공공기관 주관 수상·포상 등 선정·탈락 직무, ⑥입찰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, ⑦계약 당사자 선정·탈락 관련 직무, ⑧보조금등의 배정·지원, 투자 관련 직무, ⑨공공기관의 재화·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, ⑩학교 입학·성적 등 관련 직무, ⑪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직무, ⑫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관련 직무, ⑬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 관련 직무, ⑭수사·재판·심판·결정·조정·중재 관련 직무

< 부정청탁 예외사유 >

①법령·기준에서 정한 절차·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, ②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, ③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, 법령·제도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·건의, ④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, 진행상황·조치결과 확인·문의, ⑤직무·법률관계에 관한 확인·증명 등 신청·요구, ⑥질의·상담을 통한 법령·제도 등 설명·해석 요구, ⑦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

- (대응조치)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, 동일한 부정청탁을 거듭 받은 경우 **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\*에게 신고**

\*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

- **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**(법 제8조~제9조)

- (금지행위) 수행하는 **공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**되며, 수수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

\* 공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님

\* 민간위원의 배우자가 민간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한 경우, 배우자가 아니라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민간위원이 제재대상이 됨

<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>

①공공기관의 소속·파견 공직자들에게 지급,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, ②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·의례·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3·5·10만원 범위의 음식물·선물·경조사비, ③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, ④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, ⑤단체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, 장기적·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, ⑥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·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, ⑦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·홍보용품,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·상품 등, ⑧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

- (대응조치) 민간위원(배우자 포함)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**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**

\*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(거부의 의사 표시)하여야 하고,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함

- **외부강의등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규정(제10조)은 적용되지 않음**

#### □ 유의사항

-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는 여부는 **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확인**

\*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적용대상임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기관별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하여야 함

-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,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**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, 신고**